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2020. 4. 9.(목) 10:00~13:20

2. 장 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3. 출석인원: 별지 기재와 같음

4.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의 장 \_\_\_\_\_

간 사 \_\_\_\_\_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5차 회의 회의록

2020. 4. 9.

운영지원단

## I. 개요

- 일시: 2020. 4. 9.(목) 10:00~13:2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김순석, 김진석, 박균성, 오승이, 윤준, 이광만, 이미경, 이찬희, 최한돈(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창열(간사), 고원혁, 서현웅(이상 서기)
- 배석자
  - 이현환(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김성수(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김동규(재판제도 분과위원회), 김정숙(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서경환(법관인사 분과위원회)
  - 최수환, 홍동기(이상 운영지원단장), 박노수, 안희길, 김도현, 양석용, 유제민, 배진호, 공건개, 강정현(이상 운영지원단원)

## II. 의사개요

###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및 배석자 소개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한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어야 할 사정이 있어 부득이 오늘 진행하게 되었으나,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임을 고려하여 가급적 오전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음
  -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사법부의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함. 아시다시피 법원은 외부인의 출입이 많아 우려를 많이 했는데, 사태 발생 초



기부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노력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결과, 아직까지는 대구·경북 지역 지원의 사회복지무원 1인 이외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없음.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관찰구역도 넓고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물론 8개 지원이 있어 우려가 많았지만, 초기부터 휴정기 및 격일근무제 실시,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구성원들을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하는 여러 정책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임

- 오늘 회의는 자료집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보고 안건을 제외한 보고 안건은 모두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음. 서면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위원들께서 회의 진행 중은 물론 회의 이후라도 온라인으로 의견을 주시면 소관 분과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음

## 2.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 관련 보고(서면보고)

### 가. 신임 간사 소개

- 의장, 이창열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신임 간사로 임명하였음을 공지

### 나. 운영지원단 구성에 관한 의견수렴

- 운영지원단 구성 변경(안)을 서면으로 보고함
- 의장,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운영지원단 변경(안)을 원안대로 확정함

### 다. 웹 공간 개선사항 보고

- 웹 공간 개선사항(위원 정보 업데이트, 메일링 서비스 개시)을 서면으로 보고함

## 3. 사법행정 주요사항 보고(서면보고)

### 가. 법원조직법 개정사항 보고

- 법원조직법 주요 개정사항[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제27조 제2항 및 제3항



등), 법관 임용 결격사유(제43조),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 전환(제71조의2 신설)을 서면으로 보고함

#### 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보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창원가정법원 설치)을 서면으로 보고함

#### 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개정에 따른 대표자 선출 보고

-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개정사항 및 개정 규칙에 따라 선출된 각급 법원 법관 대표자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함

### 4.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 관련 보고(소관: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 가. 기초보고

- 이현환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음

##### ○ 윤준 위원

- 의원입법 또는 정부입법 형식 여부에 따라 공론화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 후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어떤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지 궁금함
- 만약 정부안으로 발의가 되는 경우, 정부 측에서 다시 공론화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 ○ 발제자

- 공론화 과정은 어떤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 속한 사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제안 주체에 따라 공론화의 주체도 달라질 여지가 있으리라 생각함
- 현재 선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인 상고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 1차적

목표이긴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칠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비용 문제, 우리나라 기존 사례 참조 등 공론화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있음. 법원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형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음

○ 김진석 위원

- 발제한 내용 중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의 경우,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의 관계, 재판부 간 합의의 문제, 의견 불일치 시 의사결정의 문제 등 복잡한 쟁점이 발생할 것 같음.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음

○ 발제자

- 위원회에서 여러 안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과거 시행했던 이원적 구성방안의 기본 틀은 유지하더라도, 현재 대법원에 걸맞은 제도 양식은 어떤 것인지 위원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컨대 과거에는 대법관과 그 밑에 대법원 판사 4인이 부를 구성했던 것과는 달리 부를 구성하는 대법원 판사를 2인 내지 3인으로 하는 방안 등 재판부를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를 거친 후 보고하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음

○ 오승이 위원

- 상고 사건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이는 항소심, 상고심 사건 수가 피라미드형으로 안착되기도 힘들고 원칙적인 전원합의체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임. 그리고 상고 사건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법관을 배치하거나 고등법원 상고부를 두는 것 같은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승진제도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음
- 결국 사실심 충실화를 통해 국민들의 법적 수요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법관은 물론 하급심의 법관 증원이 필수적임. 하지만 전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대법관 또는 하급심 법관 증원론에 대한 논의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



을 멈출 수 없음

○ 발제자

-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대전제로 삼았던 사항들이 있음. 현재 우리나라 1심 법관의 사건 부담이 월 90건을 넘어서고, 사법부의 예산이 나라 전체의 0.39%밖에 되지 않는 등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 영역에서의 여건이 다른 분야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임
- 현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헌법구조, 여러 가지 사법제도의 기본 틀을 기본 전제로 상고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상고제도의 외적 요인, 즉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법 영역의 규모 또는 법관 개인의 업무량 등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현 상황에서 상고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집중했음
- 말씀하신 것처럼 1심 법관의 수를 늘려 1심 사건의 심리가 충실히 진행되는 경우 불복률이 낮아질 것이고, 불복률이 낮아지게 되면 상고사건의 수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자명함.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사건수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 개별 법관의 업무량이 많아 사실심의 충실한 진행에 부담이 된다는 점, 사법부의 규모나 예산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고 권리와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여 국민들에게 채택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심할 수밖에 없었음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음

○ 이미경 위원

-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법원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점을 보면 1,2심에 대한 신뢰 제고 방안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료집 22쪽에서 설명하는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음.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생경한 법적 언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각 안의 문제점, 장·단점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발제자

- 말씀하신 취지를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단순한 찬반형 여론조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상고심을 경험한 당사자,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 등 적절한 설문조사 대상 선정 방안,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특별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질문 및 의견제시, 이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음

○ 박균성 위원

- 상고허가제 또는 다른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상고허가 사유 또는 심리불속행 사유가 검토된 바 있는지?

○ 발제자

- 현재 우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불속행 사유를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되어 있지 않음

○ 박균성 위원

- 재판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점, 국민들 입장에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대해 납득하고 수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리불속행 사유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음
- 판단기관의 문제, 즉 심리불속행 결정을 하는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중요한데, 발제하신 안 중 상고수리허가제 부분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도 향후 구체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마련한 안을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 개선이 목적된 바와 같이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 시행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제자

- 상고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게 되면 심리불속행 사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음
- 심리불속행 결정을 하는 재판부 관련, 예컨대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안의 경우 각 재판부에서 기존의 심리불속행 사유를 판단토록 하는 경우 그 이유가 판결문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포섭할 수 있을 것 같음
-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연구·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음

○ 윤준 위원

- 발제하신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하고, 3가지 안 중 장점만을 합친 새로운 안은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함. 예를 들어 일부 사건은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최종심으로 담당하고, 대법원으로 상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수리·허가제 요소를 도입하며, 최종적으로 본안에 들어가는 사건은 이원적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 충분히 심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음. 이와 같이 각 안의 장점만을 취합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 발제자

- 대법관 증원도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와 같은 증원이 아닌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의 한 방안으로서 소수 증원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고, 상고수리·허가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불복이 있는 경우 1, 2심 재판장이 불복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는 방안, 항소심도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처럼 기존의 안들을 통합하는 안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음
- 현재 제시된 3가지 안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면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가 단 1회 개최되었고, 현재 제시된 안도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임. 앞으로 논의가 진척될 때마다 따로 자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할 테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주시면 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가능한 한 연내 검토를 마쳤으면 좋겠지만, 논의 주제가 워낙 크고 무거울 뿐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므로 특별위원회도 너무 속도나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실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음





## 5. 법원시설관리 예산 배정기준(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 법원시설관리 예산 배정기준을 서면으로 보고함

## 6. 전용차량 등 개선방안(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 가. 기초발제

- 김성수 분과위원장 기초발제

- 전용차량 배정기준 개선방안에 관하여 ① 전용차량 배정기준 유지 여부, ② (전용차량 배정기준 변경 시) 구체적인 전용차량 배정기준안과 그 시행시기, ③ (전용차량 배정기준 변경 시) 배정기준 변경에 따른 보완조치를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전용차량 등 개선방안 논의는 보고가 된 것처럼 고등부장 제도가 입법적으로 폐지되기 전에 만들어진 내용임
- 보고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전제로 신규 고등부장을 보임하지 않음에 따라 전용차량 배정대상이 없어질 때까지 전용차량 배정기준을 종전으로 유지하고, 배정기준을 변경할 경우 자료집 105쪽에 기재된 직위를 그 대상으로 하며, 배정기준 변경 시 그 시행시기는 2021년 2월 인사 시 일괄적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분과위원회의 다수의견임
- 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됐지만 경과규정이 있어 종전에 보임된 고등부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변경된 상황에서도 분과위원회의 다수의견과 같이 배정대상을 유지할 수도 있음. 하지만 입법으로 고등부장 직위가 폐지됐기 때문에, 배정기준을 변경을 해야 할지 여부, 변경하는 경우 그 대상, 변경 시 시행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므로 위 3가지 위주로 말씀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 의견이 있었음

- 본인이 법원장으로 있다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는데, 주위 고등부장

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는 경우 전용차량을 반납해도 되나 보완책도 없이 전용차량 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 차관급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공무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검사장은 엄밀히 말해서 차관급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음. 하지만 검찰의 전용차량 배정 관리규정을 살펴보니, 검사장에게는 81년 공용차량 관리규정이 개정되기 전부터 전용차량을 배정했기 때문에 차관급 아닌 검사장들에게 시혜적으로 전용차량 이용을 하게끔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결국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전용차량을 반납한다 하더라도, 이미 규정상 근거 없이 이용하던 전용차량을 그냥 반납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음
- 법원의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고등부장이라는 직위를 기준으로 차관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관측되는 판단 하에 대법원 규칙으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제정했음. 즉 법원은 대법원규칙이라는 근거를 두고 전용차량 지급이라는 예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차량을 반납하려면 필수적으로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전용차량 배정기준을 변경한다고 결정해도 대법관들이 규칙 개정 반대하는 경우 현재 배정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위원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음
- 검찰의 권한 내려놓기 일환으로 반납하는 차량은 9대로 알고 있음. 9대를 반납하면서 반납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명예퇴직수당, 직무성과금 등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검찰은 내려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법원이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83명의 고등부장에게 지급된 전용차량을 반납하는 것은 대부분의 고등부장이 지적하듯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생각함. 또한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향후 매년 고등부장이 퇴직하게 되면 그 퇴직자에 대한 전용차량은 반납되는 것임에도 굳이 일정을 앞당겨 대법원 규칙까지 개정하면서 일률적으로 반납하는 것은 시류에 영합하고 검찰 따라가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음
- 오히려 퇴직하는 고등부장에 대한 전용차량 배정 자연감소분만큼 경륜 있는 고법판사 혹은 지법부장에게 어떻게 배정할지를 고민하고, 혹은 전용차량을 오히려

늘려 채우가 좋지 않은 고위법관에 대한 예우를 갖출 필요가 있음. 미국 연방법관이 존경받는 이유에 대하여 변호사를 할 경우 2,3배 더 벌수 있음에도 박봉에 희생하는 그 점 하나로 존경받는다라는 이야기를 국제컨퍼런스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향후 유능한 변호사를 법관으로 영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서 법관 보수를 올려주지는 못하여도 법관에 대한 예우만이라도 종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들께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함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의 입장 및 고등부장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현행 배정 기준을 유지하고 고등부장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만 전용차량을 반납하는 안이 다수의견인 것 같은데, 본인은 이에 반대하고 현행 배정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함
- 실질적으로 현행 고등부장에게 배정되는 전용차량은 출퇴근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전형적인 예산 낭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윤준 위원께서는 고등부장에 대한 전용차량 지급은 대법원 규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당성을 지닌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미 90년대에 폐지된 고등부장 직급제를 바탕으로 전용차량이 지급되는 것인 만큼 전용차량은 고등부장 직급제를 표상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이와 같은 점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물론 명분상으로도 고등부장에 대한 전용차량 배정을 유지할 실익이 별로 없음
- 대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업무지원의 의미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부장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나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권위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국민의 지지와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할 상고심 개선을 비롯한 각종 사법개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현행 전용차량 배정기준은 하루속히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
- 기존 고등부장에게 배정되는 전용차량을 폐지하는 것이 헌법 제106조에 위반되고, 종전부터 인정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음. 하지만 헌법 제106조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정계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법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지원 혹은 비용보전 등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고등부장에 대한 전용차량 배정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이고 봉급과 같은 성격의 급부라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06조 등을 이유로 전용차량 배정기준 변경에 반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전용차량 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배정기준안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함. 서울가정법원장을 제외한 다른 가정법원장과 지방법원장을 구분하는 것이 고등부장급 법원장과 지방부장급 법원장을 구분하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처럼 보여 부정적 입장이었는데, 서울가정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법원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고려하면 분과위원회 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전용차량 배정기준 변경 시 보완조치 관련,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를 된다는 전제 하에 분과위원회의 제안과 같이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안에 찬성함.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검찰과 같이 2년 6개월 이상 전용차량 배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현재 고등부장의 대부분이 이 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전용차량 배정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면 결국 전용차량 배정과 명예퇴직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셈이 되고 자칫하면 이 기회에 다수의 고등부장이 일시에 명예퇴직 신청을 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 보임
- 따라서 분과위원회 안에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하고자 함. 고등부장에 게도 명예퇴직수당을 전부 인정하되, 그 액수는 고등부장 재임 중 전용차량을 배정받지 못한 기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안임. 예컨대 명예퇴직 시 고등부장 재직 연수가 7년이고, 4년 간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경우, 통상의 명예퇴직수당 중 7분의 3을 지급하는 것임
-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하여 덧붙일 의견이 있음. 일선 법관들 사이에 고등부장이 아닌 16호봉 이상의 법관에 대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고등부장이 되지 못한 장기근무 법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이로 인해 16호봉 승급을 앞둔 장기근속 법관들의 퇴직을 촉발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전용차량 배정기준 변경을 논의하는 기회에 16호봉 이상 법관에 대해 명예퇴직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고등부장이 아닌 16호봉 이상 법관들에게 직무성과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의 형평상 전용차량이 폐지되는 경우 고등부장에게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이 경우 고등부장을 포함한 16호봉 이상 법관에 대해 어떤 근거로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거의 최한돈 위원께서 해주셨음. 본인이 이 안을 처음 제안한 것은 법관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긴 하나 지급되는 전용차량은 실질적으로 출퇴근용으로만 사용되고, 전용차량 운전을 위한 관리직이 정규직으로서 채용되는 것이 너무 인력낭비가 심하다는 문제의식에 기한 것이었음. 물론 검찰에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을 폐지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법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방금 최한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익도 별도 없는데 예산만 많이 소요된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음
- 놀란 점은 전용차량을 배정받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배정기준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60%임에 비해 축소를 주장하는 비율 역시 20%가 된다는 점임. 게다가 주관식 설문에 응한 내용들을 보면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전용차량 배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까지 합치면 전용차량 배정기준 유지에 대한 찬반은 6:3 정도라고 여겨짐
- 본인 역시 고등부장으로 재직하시다 퇴직하신 분으로부터 ‘전용차량으로 인해 법관으로서 대우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면 법관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기 힘들어질 것 같아 법원을 나오기로 했다’는 말씀을 실제로 듣기도 했음. 하지만 법관에 대한 예우는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때 지켜지는 것이고, 그럴수록 국민들로부터 법관이 더 존경받을 수 있으리라 생



## 각함

- 하지만 전용차량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전용차량이라는 보호를 받을 만한 일종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냥 박탈하는 것은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직무성과금 등 배정기준 변경에 따른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음
- 전용차량 유지 여부는 내부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 및 이에 대한 이찬희 위원의 반론, 이광만 위원의 재반론이 있었음
  - 이광만 위원
    - 최한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차량 폐지 문제와 수반하여 검토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명예퇴직에 대한 제도규정은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평소 생각이었음
    - 고등부장에게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부장이 아닌 16호봉 이상의 법관이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법관 경력의 문제뿐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음
    - 검사나 다른 공무원은 자신의 현재 연령부터 정년까지 기간에 상응하는 명예퇴직수당을 받음. 하지만 법관의 경우 정년은 65세임에 비해 임기가 10년이기 때문에 정년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에 가까우면 정년으로, 임기가 가까우면 임기로 계산이 됨. 예를 들어 지법부장이 16호봉 이상이 되면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못 받게 되고, 16호봉이 되기 전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임기 직전이 되어 수령하는 명예퇴직금이 거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전용차량과 결부시켜도 좋지만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라도 16호봉 이상의 법관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꼭 바꿨으면 좋겠음
    - 지난 회의부터 전용차량 폐지 문제를 두고 계속 헌법 문제가 나오는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 반면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



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 헌법 조문을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사법부의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관의 독립과 신분보장이 있는 것이므로, 전용차량 문제는 법관의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출퇴근용, 가끔씩 현장검증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되는 측면은 상당히 많은 것 같긴 하나, 이번에 개정된 법원조직법 부칙에서 기존의 고등부장은 유지한다고 규정한 취지, 그리고 고등부장이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자연감소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음. 고등부장 퇴직으로 인해 생기는 전용차량 자연감소분은 그 명칭을 굳이 전용차량이라고 쓸 필요 없이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하여 고법판사 또는 지방법원 수석부장을 대상으로 재판부당 1대씩, 그게 되지 않는다면 고등부장 2인에게 1대씩 정도라도 지원하는 것이 내부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찬희 위원

- 법관의 독립을 위해 전용차량을 유지해야 한다면 모든 법관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해야지 법관의 독립이 된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임. 소수의 고등부장들에게만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전체 법관의 독립이라는 취지와 맞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음
- 고위법관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는지 외국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고위법관에 대한 예우, 검찰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용차량을 배정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음을 고려해야 함. 고등부장 이상 모든 법관에게 종전과 동일하게 전용차량 배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 외부 국민이나 국회의 시각에서는 더더욱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 이광만 위원

- 30~40년 동안 계속 전용차량이 지원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다른 보완책 없이 처우를 없애는 것이 헌법 제106조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분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찬희 위원께서 불리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과 생각이 다른 것임을 말씀드린 것이지 전용차량이 제공되어야만 법관의 독립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바는 전혀 아님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기본적으로 최한돈, 이찬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찬성함.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실상 직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닌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임. 본인이 96년에 법관으로 임관했는데 그 무렵부터 벌써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단일 호봉제로 운영하면서 전용차량 폐지 문제에 대해 당시 설문조사를 했던 기억이 남. 당시에 전용차량을 폐지하자는 쪽이 다수의견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계속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차량이 배정되는 것이 맞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등부장들은 대부분 출퇴근 위주로 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해 전용차량을 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듦. 기존에 전용차량을 배정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와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서 사기저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오랜 기간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차량 배정기준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법원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윤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크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전용차량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관리직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되는 바가 별로 없고, 결국 80~83대 차량에 대한 유류비 및 렌트비 정도만 줄어드는 것이어서 예산 절감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함
- 또한 검찰에서 전용차량을 반납했으니 법원의 고등부장들도 차량을 반납하게 되면 국민들은 검사나 판사나 결국 같다고 생각을 할 것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은 근거 없이 전용차량을 사용했지만 법원은 대법원규칙에 근거하여 차량을



배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검찰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매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도 우수한 분들이 법관으로 임관되는데, 이분들이 행정부에서 25년 정도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차관급이 돼서 전용차량을 배정받았을 것임. 행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전용차량을 쓰는 것은 용인하면서 법관들이 25년 이상 고생한 후 전용차량을 배정받아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 낭비이고 권위주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고위법관에 대한 대우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본인이 고등부장들의 고충을 다 헤아리기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접했을 때 현재 전용차량 배정기준을 축소·변경하자는 의견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고, 이는 국민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 축소·변경에 관한 보완책 관련, 직무성과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고등부장이 아닌 16호봉 이상의 법관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재산공개 및 취업제한은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 보조를 위한 직급보조비 증액이 가장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안이 아닐까 생각함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관의 독립을 위해 법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용차량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한다는 생각이 듦
- 고등부장이 사실상 직급으로 운영되고 특권으로 여겨진다는 점,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출퇴근용으로 제공되어온 점을 고려했을 때 전용차량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전용차량은 급여라기보다는 일종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정변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고, 헌법상의 문제까지 나올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물론 대법관규칙을 개정해야겠지만 현재 배정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개정기준을 변경하자는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회의에서도 개정기준을 변경해 줄 것이라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차량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 기존에 제공됐던

것이 박탈된다는 점이 문제이긴 하나, 직무성과금 등 보완책을 마련하되 고등부장에게 지급되는 전용차량은 폐지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 같음

- 기관장에 대해서는 차량이 지원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 이외의 가정법원이 비록 그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장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함
- 명예퇴직수당은 그 본래의 취지와 맞게 운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이 전용차량 문제와 결부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음. 법관의 경우 임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비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정년퇴직 2~3년 전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면 좋겠음

■ 다음과 같은 김순석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전용차량 문제는 평생법관제와 결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음. 평생법관제를 정착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정년도 지금보다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먼저 고등부장제 폐지에 따른 전용차량 자연감소분을 반납하겠다고 제안했으면 사회적으로 매우 환영받았을 것이라는 점임. 하지만 국회에서 먼저 개선 요구를 한 상황에서 자연감소분만 반납하겠다고 하는 경우 언론이나 여론으로부터 법원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위험성이 있음
-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고등부장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현재 배정기준을 유지한 채 퇴직하는 고등부장에게 배정되던 전용차량 자연감소분만 반납하는 것이 충격을 줄일 수 있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법원이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후생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음. 비록 분과위원회는 일률적 변경안을 지지하긴 했으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배정되는 전용차량을 축소하되 그 축소를 위한 구체적 스케줄을 외부로 제시하는 경우 여론의 수용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의견이 질문 및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있



었음

○ 이광만 위원

-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용차량 개선방안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국회에 보고되었는지 궁금함
- 또한 4월 6일 한 언론에 국회의원실에서 제공된 자료라고 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그 기사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작성된 것인지 그 연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음

○ 기획조정실장

- 비록 부대의견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전용차량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임
- 법제사법위원회에 재정·시설 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구체적인 사항을 뺀 개요를 중간보고하였고, 원래 시한인 3월 말이 아닌 4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음
- 폐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나뉜 상태여서 만약 전용차량을 감축하는 정책결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보고했는데 한 의원실에서 보고 내용을 언론에 제공하고, 그 언론은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보도된 것임

■ 다음과 같은 이미경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우리 사회는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이 판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게 전용차량 제공 여부는 (어린이들이 판사되기를 꿈꾸는데) 그리 큰 영향력이 없을 것임.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국민들의 존중과 신뢰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본인의 의견을 갈음하고자 함

■ 다음과 같은 최한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전용차량 폐지 문제는 10년 이상에 걸쳐 계속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어느 정도 폐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되는 경우 정책 판단에 따라 완전 폐지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염려가 됨



- 분과위원회의 다수의견도 일괄 변경이므로, 비록 리스계약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다수의 위원들께서 현재의 전용차량 배정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음
- 윤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과 법원이 다른 면이 있음. 검찰의 전용차량 제공은 그 근거가 없는 반면 법원의 전용차량 제공은 근거가 있었고, 또한 검찰의 경우 2~3년마다 검사장이 교체되므로 큰 문제가 없는데 법원의 경우 오래 계신 분들은 10년 이상 고등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 급부에 대한 기대 또는 신뢰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음
- 전용차량 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완조치를 마련하면 좋겠지만, 그 보완조치라는 것은 결국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등 쉬운 것이 없음. 비록 전용차량 폐지 문제가 보완조치와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우려 역시 있으므로 보완조치에 관한 검토는 따로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임
- 고등부장제가 폐지됨으로써 취업제한, 재산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설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겠지만, 오늘은 전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음

다. 결정사항

-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하여는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용차량 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다수의견, 이에 대하여 그대로 배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대외기관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큰 일부 보직자에 대하여는 전용차량 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변경된 배정기준의 시행시기와 폐지 시 보완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시행시기와 폐지 시 보완조치에 관한 검토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지시함)



## 7.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소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 가. 기초발제

#### ■ 김동규 분과위원장 직무대행 기초발제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에 관하여 ①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 여부, ②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방안, ③ 관련 예규 개정, ④ 시행의 시기 및 범위를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 나. 토론

- 위원들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음

### 다. 결정사항

-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에 관하여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할 현실적인 여건도 마련되었음. 따라서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하여도 증거분리제출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하여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 전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 또는 공판회부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약식계에서 해당 검찰청으로 수사기록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고정/고단재판부의 통합운영 또는 고정전담재판부에 대한 배당에서의 고려, 담당 직원들 사이의 적절한 업무 분장 및 인력 보충, 관련 예규의 개정, 검찰과의 업무 협조 등이 필요함
- 절차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2020년 하반기에 일부 법원을 상대로 시범 실시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021년 정기인사에 맞추어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8.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관한 중간보고(소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 가. 기초보고

-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관한 중간보고를 서면으로 보고함

##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김진석 위원 의견이 있었음

- 노사관계법원을 중기적 검토 필요 법원으로 분류한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함.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중첩되고 행정법원 사건 중 상당 부분이 관할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의 노동전담재판부를 집약한 형태의 노동법원 설치가 가능한 것처럼 노사관계법원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노사관계법원 역시 단기적 검토 필요 법원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구 및 검토에 따라 향후 얼마든지 그 내용을 형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노사관계법원’이라고 명명부터 한 것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음
- 단기와 중기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염두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듦

- 다음과 같은 오승이 위원 의견 및 이에 대한 사법정책 분과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음

- 오승이 위원
  - 해사법원이 다른 전문법원을 제치고 단기적 검토 필요 법원으로 분류된 것이 뜻밖인데, 이에 대해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듦. 조세법원의 경우에도 해사법원보다는 사건 수가 많을 것 같은데, 조세사건에 대해 현행 전담 재판부가 나름대로 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논거를 제시한 것처럼 해사사건 역시 전문부 설치로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 다른 전문법원과 달리 해사법원에 대해서만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한 연유 역시 궁금함
- 사법정책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회 위원들 입장에서도 해사법원은 워낙 낮설었기 때문에 검토 초기 단

계에서 그 순위가 밀렸었음. 하지만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만 4건이나 되고, 지역에서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인데 단순히 해사사건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순위를 뒤로 미루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인천 및 부산의 변호사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게 되었음

- 초청 전문가가 강하게 주장한 해사법원 설치로 인해 얻게 될 장기적인 비전 또는 효과 등에 위원들이 공감을 하긴 했지만, 전문법원 설치 소위원회와 달리 분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이 설치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부족한 것 같음
- 해사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해사법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해사법원이 설치되는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대 형성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진행한 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본인 역시 몇 년 전 부산에서 근무하면서 해사사건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해사법원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파악했다고 생각함
- 근래 영국에서 전 세계 해사사건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고, 해사사건과 관련하여 영국으로 유출되는 비용이 적게는 300억, 많게는 500억 이상이 된다고 함. 최근 중국 연안에 10개소의 해사법원을 만들었는데, 우려와 달리 중국 법원이 사건을 잘 처리하여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건이 영국이 아닌 중국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서도 해사법원을 만들어 사건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사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현재 몇 개의 해사 전문재판부가 있지만 사건 수가 미미한 실정인데, 분과위원회에서 한 번 잘 챙겨보시고 보고해주시기 바람





## 9.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등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소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 가. 기초발제

#### ■ 김정숙 분과위원장 기초발제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등 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하여, ① 판결문의 점자·전자 파일 등 개별 수요에 맞는 제공의 필요성, ② 판결문 점자·전자 파일 등 제공 방안, ③ 판결문 외 소송서류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 나. 토론

####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지금도 판결문, 조서, 기일통지서 등에 음성출력 바코드를 입력하여 시각장애인이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넘어 점자로 된 문서를 받고 싶다고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음

####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의 질문 및 발제자의 답변, 이에 대한 이찬희 위원의 의견 및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음

##### ○ 이찬희 위원

-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점자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발제하였는데, 소송당사자 혹은 소송관계인에 한정해서 신청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국민인 시각장애인이 판결문을 신청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함

##### ○ 발제자

- 일단은 소송당사자임

##### ○ 이찬희 위원

- 시각장애인인 일반 국민도 판결문 열람 신청을 할 경우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비하는 방안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음

##### ○ 발제자

- 그 부분도 회부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 장애인사법지원 소위원회 위원들께서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판



결문 공개가 가능한 경우라면 시각장애인의 요청 시 당연히 읽을 수 있게 점자 판결문을 제공해야 할 것 같음

■ 다음과 같은 이광만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재판을 하다보면 외국인이 1심 판결 선고 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를 듣지 못하고, 판결문을 송달받아도 한글을 몰라 항소기간 및 항소법원을 지키지 못해 추완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음
- 판결문 송달 시 정본임을 나타내는 말미용지에 법원사무관 등의 직인을 찍고 네모 박스 안에 상소할 기간 및 상소할 법원을 기재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판결 주문, 상소기간 및 상소법원을 번역해서 알려주고,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음

■ 위원들은 사법정책 분과위원회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음

**다. 결정사항**

-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문을 점자나 전자파일 등 개별 시각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점자나 전자파일 등의 제공에는 관련 지식, 설비, 인력 등이 필요하므로, 우선은 문서 변환에 대한 전문성, 설비, 인력 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약이나 위탁 등을 통하여 시행한 후, 그 시행 결과 및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뒤 법원 자체적으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변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 판결문 외 기일통지서와 같은 전형적인 문서도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그 밖의 소송서류에 대하여도 시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

**10.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방안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방식 등에 관한 검토(운영지원단 보고)**

**가. 기초발제**



■ 김도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기초발제

-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방안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방식 등에 관하여, ① 논의기구의 연구·검토 범위, ② 논의기구의 구성 방식을 논의 쟁점으로 제시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이찬희 위원 의견이 있었음

- 언제까지 존속하는 기관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분과위원회 방식에 대해 약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합리적인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에 대한 것을 검토한다면 초기에 TF로, 추후 분과위원회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수궁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박균성 위원 의견이 있었음

- 3안에 찬성함. 국민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분과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인사도 포함되고, 학계 전문가도 1인 정도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논의 결과, 위원들은 운영지원단이 제시한 기본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음

다. 결정사항

■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개선 방안을 연구할 논의기구 구성 관련

- 초기에는 ‘TF’ 형식으로 진행하다가 추후 ‘분과위원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추후 분과위원회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 명칭은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절함
-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초기 ‘TF’는 ‘법관 4명 + 변호사 4명’ 정도로 구성함이 적절하고, 추후 ‘분과위원회’는 ‘법관 4명 + 변호사 4명 + 외부위원 2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법관 위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대법원장 지명 등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적절함

## 11. 사법행정자문회의 신규 안건 제안: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가. 제안 설명



■ 오승이 위원(대표제안 위원) 제안 설명

#### 나. 결정사항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보고를 받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김순석, 박균성, 이미경, 이찬희 위원 이석

※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 배진호 인사심의관, 강정현 인사담당관, 서현웅 사무관(서기)을 제외한 배석자는 퇴장

### 12. 2020년 법관 정기인사 개요 보고

#### 가. 기초발제

■ 서경환 분과위원장 기초발제

○ 현장 배부한 별도 자료에 의하여 2020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6개 보직인사 결과를 보고함

- ①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 현재 파견연구관 선발, ③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④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⑤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⑥ 고법판사 신규 보임

#### 나. 논의사항

■ 위 6개 보직인사 결과 및 고법판사 신규 보임 기준에 관하여 논의함

### 13.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5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 처리할 부분은 없다고 의결함

###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임시회의)

■ 일시: 2020. 5. 14.(목) 14:00

■ 장소: 대법원

(끝)